

위험한 비보호 좌회전 줄이고 난폭 오토바이 단속을

교통사고 줄입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하> '사고 주범'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역 경찰관들과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증가 이유로 다른 지역에 견줘 월등히 많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꼽는다. 차선 사이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은 일삼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난폭 운전이 평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도 '교통사고 유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선택적으로=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광주 시내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모두 777곳에 설치됐다. 인구가 비슷한 대전(430개)에 걸췌 1.8배나 많다.

주요 선진국에선 비보호 좌회전이 보편적이지 않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와 주의 운전을 동반할 경우 도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점에서 해의 주요 선진국 등은 비보호 좌회전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구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나 과속 운전이 잦은 곳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유모(여·26)씨는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남짓인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맞닥드리면 식은땀부터 난다"면서 "좌회전 신호를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비보호 좌회전 신호 777곳

사고 4997건→설치 후 6728건

오토바이 편법 개조 다반사

곡예운전·핑음에 시민 공포

교통 효율성보다 안전 우선돼야

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두기 전보다 좌회전 신호를 설치한 이후 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좌회전 신호 전 4997건이던 사고 건수가 6728건으로 34.6%나 늘었다. 사망자도 64명에서 90명으로 40.6%, 부상자는 7136명에서 8670명으로 21.5% 증가했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 본부장은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입이 되는 구간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철저히 구분하고 기준을 마련해 설치·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가 급증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부쩍 늘어났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증가세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7건으로 지난해 196건에 견줘 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벌써 7명이나 된다.

오토바이의 무법 행위도 심각하다.



경찰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광주경찰이 지난 4월-5월 2차례에 걸쳐 이륜차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한 오토바이 불법 행위만 4196건에 달한다.

집중 단속 기간인 32일 동안 하루 평균 위반행위로 131건을 적발한 셈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가다 적발된 경우가 2926건이나 됐고 신호위반(604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587건) 등이었다. 그만큼 불법 운행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많다는 얘기다.

여기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소음기를 변형, 평

음을 내며 차선 사이를 질주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찰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으니 무법행위가 증가하고 시민들 불안만 쌓이는 모양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이륜차 배기소음 제한수치(105dB)를 약간 못 미치는 100-104dB 수준의 구조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꾸준하다는 게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측 설명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 구조변경 등을 엄격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평균 75dB)을 고려해 소음 허용기준(105dB)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90dB만 넘어가도 보행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큰 소리인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소음 허용기준이 바뀌지 않은 이상 광음 오토바이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30차례 넘는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받은 3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6년 동안 무려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로 1억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109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A씨의 31차례 교통사고 중 3개 사고만 고의로 유발된 것이라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이들 뒷받침하는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작성자 개인 추측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는 등 실증적 방법에 의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 의뢰를 받아 작성된 점, 정반대 취지의 사적 감정인 진술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파손된 전두환 단죄상 고쳐? 말아?

시민 단죄에 훼손...수리·철거 등 시민 의견 다양

5월단체 다음주 의견 수렴

심하게 훼손된 '전두환 단죄상' (사진)을 놓고 5월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4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전두환 조형물의 경우 얼굴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상반신이 쪼개진 채 널부러져 있는 상태다.

조형물이 설치된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조형물을 '단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가 부서진 조형물을 수리해 광주로 옮겨왔는데 다시 망가진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심하게 파손된 전씨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5월 단체 등은 지난 4월 27일 전씨의



광주법정 출두에 맞춰 광주로 옮겨왔다. 애초 재판 당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작가에게 돌려주려다 시민단체 요청 등으로 옛 전남도청에 계속 설치기로 했다.

5월단체 등은 전씨 조형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의견을 수렴중으로, 부서질 때마다 수리하자는 의견과 이제 철거하자는 쪽, 부서진 그대로 놓아두는 게 시민들 심경을 대변하는 길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단체 관계자는 "다음 주 의견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라며 "철거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이사 선출과정 금품 제공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지방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이사회 명단과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품살포 의혹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지난 3일 임기가 끝난 선출직 이사와 사외이사들 후임을 뽑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돌연 연기한 상태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면적(회장·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 등 3명), 선출직 이사(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으

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특히 농·축·품목 조합장 이사 18명(각 도 9명, 서울·광역시 1명, 품목조합 6명, 축협 2명)으로 이뤄지는 선출직 이사들의 경우 농협 전남지역 본부를 비롯한 각 농협지역본부별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를 통해 후보자로 추천된다는 점에서 임후보 예정자들의 금품 살포 의혹이 잇따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내부에서도 농협전남지역본부 이사 후보자 추천회의 임후보자가 선거인단 120여명에게 6만원 상당의 쿠폰세트를 살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가 하면, 임후보자들의 금품 살포 소문이 파다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급기야 '혼탁선거 방지하는 농협중앙회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파쇄기 사망은 사회적 타살"

김재순 대책위 중간조사 발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쇄기에 끼여 숨진 김재순(25)씨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며 "자기 과실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치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 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안전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업체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